

원자력발전소·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

<보도내용>

- 2025.8.18. 이데일리 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…부지 선정
힘로 예고」 기사에서,
- ① 이데일리는 “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km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
방폐물 시설은 5km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”,
- ② “전북 고창군 등 원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에 대한 보상이나
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① 원자력발전소는 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」에 따라 반경 30km 이내의
지역이 아닌 반경 5km 이내의 읍·면·동을 지원하므로 사실과 다름
- *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
'25.9.26 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경 5km 이내의 시·군·구 지원할 예정
-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
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 해당 및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
없음
- *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별개의 시설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
관리시설 부지는 공모, 신청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

담당 부서	원전산업정책국 원전환경과	책임자	과 장	윤정원 (044-203-53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044-203-5348)